

환경교육정책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 종 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류가 지구상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오면서, 산업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부와 빈곤의 편중에 따른 생활로 지구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켜 왔다. 그러한 변화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 지구의 표층 생태계와 대기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갖가지 현상으로 나타나 인류의 생존을 오히려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변화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온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심각한 환경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유행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국가의 정책과 사람들의 생활에 폭넓게 인용하고, 사용해 왔지만 근본적인 국가 정책이나 사회 발전의 방향 전환을 일구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단순히 수사적인 만족으로 그치거나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개발 -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세련되고 밀도가 높은 개발을 확대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자는 개념이 개발을 부추기는 데에도 이용되었다는 것은 환경교육의 역할이나 실행 방향이 그 고상한 개념의 확산속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교육의 목적 중에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 난제를 극복하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 환경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국가 환경정책에는 환경에 있어서 그 나라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은 정책에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도록 국민들에게 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때로는 민간사회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의 조정도 국가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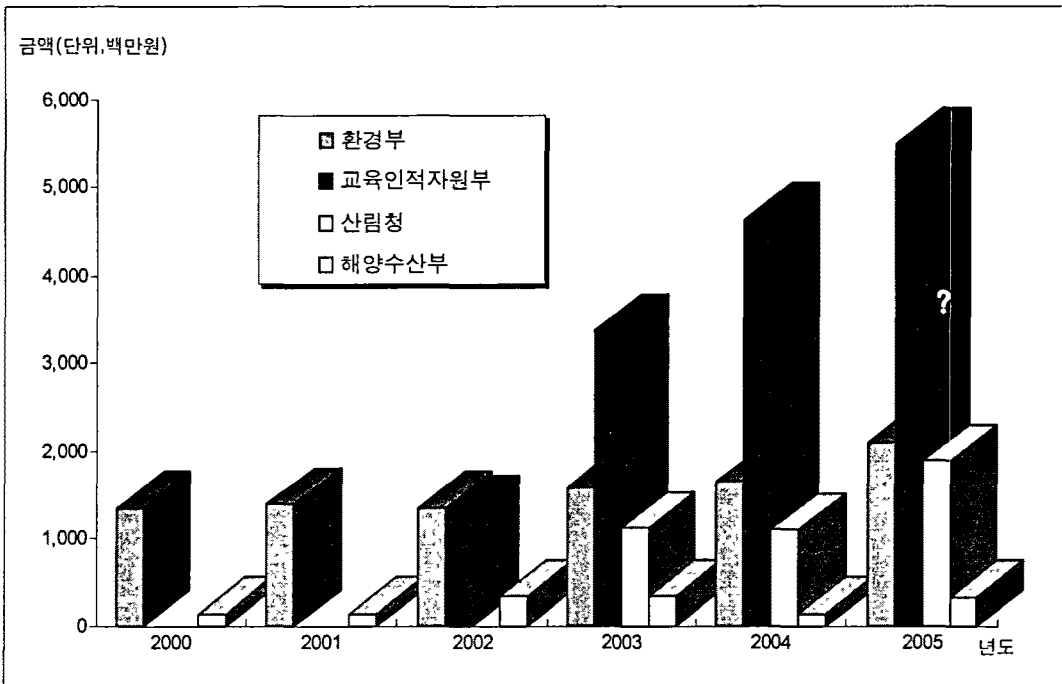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부서 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의 관련 정책과 예산 등을 정부가 제공한 자료로 파악하였다. 예산은 2000년 이후의 것만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역사를 보면 정부가 1970년대부터 일정한 환경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예산 규모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교육에서 관련 교과목 확대와 연구비 지원 등으로 분야가 제한되었던 것 같다.

1. 환경교육 정부 예산 개요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예산을 수반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실행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 부서의 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현재의 정책 실행과 미래의 방향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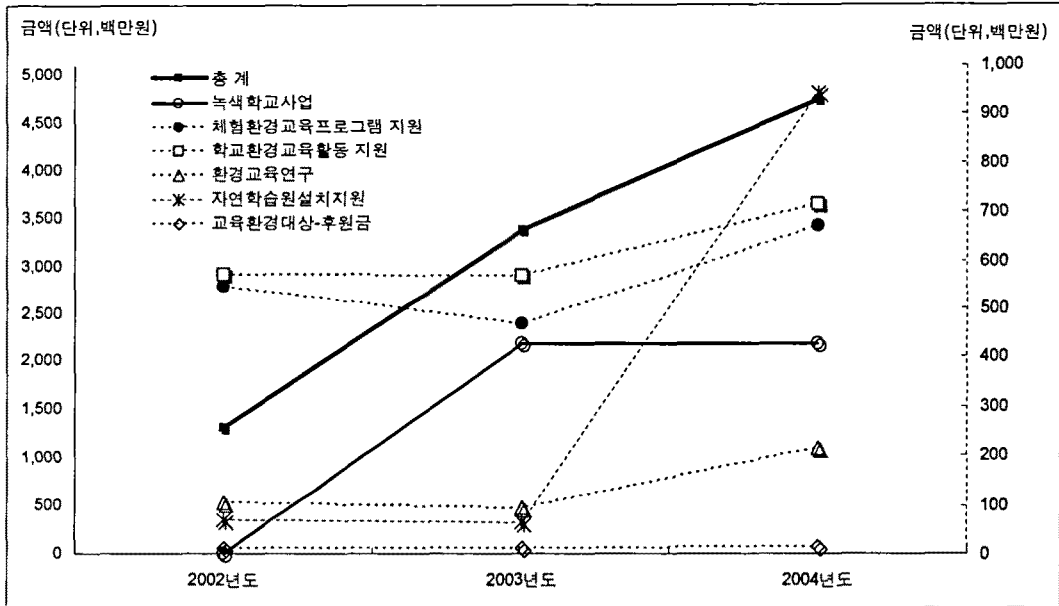
에도 별도의 관련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관련 정책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그리고 산림청은 2003년부터 분리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전체 환경교육 예산의 계략적인 집계가 가능하였다. 환경교육에 소요되었던 예산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3년간은 약 27억원~30억원 전후였으나, 2003년에는 약 64억원, 2004년에는 약 75억원, 2005년에는 90억원이 넘어서 100억원대에 접근하고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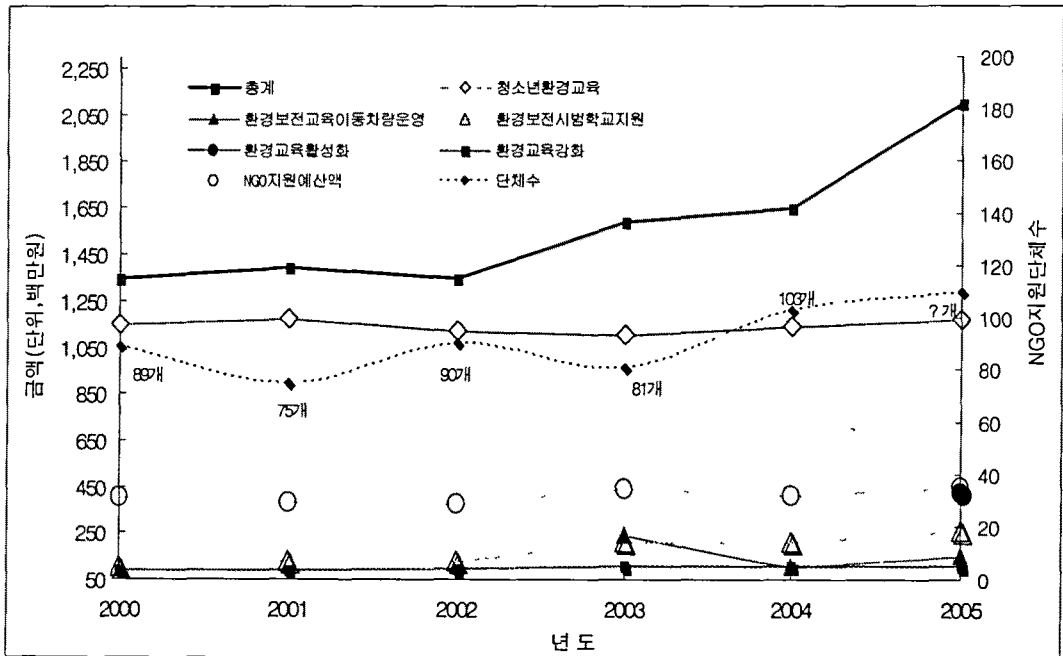


<그림 1> 2000년 이후 정부 부별 환경교육관련 예산변화(교육인적자원부의 2000년과 2001년 예산집행액은 확인되지 않았음)

예산의 부서별 비중을 보면 2003년 이후에는 전체 정부 예산의 50%이 넘으며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의 예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교육 예산은 부 전체 예산의 약 0.1%에 불과하다. 쓰임새별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까지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고, 2003년부터는 녹색학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예산의 50% 전후를 차지하였다. 환경부인 경우는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림 2, 3).



〈그림 2〉 2002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경교육 예산 변화.



〈그림 3〉 2000년 이후 환경부의 환경교육 예산 변화.

2. 환경교육의 정책목적과 주요 내용

환경교육 정책을 가진 정부 내 부서 -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의

정책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인적자원부

- 목적 ;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환경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생활화 하도록 함
- 환경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시 재량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계발활동)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에 힘쓰도록 함
-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함
- 실천·체험활동 위주의 환경교육을 전개함
- 학교 환경 교육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운영을 지원함
- 전문적 환경지식과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기 위하여 환경관련 교사 연수 실시를 권장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와 우수교사를 발굴·표창함
- 환경보존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하천(강포함) 관리 지정학교 운영
- 시·도교육청 평가시 환경교육 관련 평가 항목에 반영('01년, '03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함

나. 환경부

- 목적 ;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의식과 생활양식의 정착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환경보전 실천과 환경보호활동 참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함

학교환경교육 강화(주관 : 환경부, 협조 : 교육인적자원부 등)

- 환경교육 강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04. 4),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환경교육 협의회를 구성('04. 10)하여 주요 환경교육정책 협의
- 유치원, 초·중등학교 26개교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환경연수 교육
- 학교의 환경교사와 민간단체 환경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 전용 웹사이트(www.keed.net)구축·운영('04. 7)
- 유치원, 초·중학생용 환경교육 교재 7종 발간 중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주관 : 환경부, 협조 : 시·도 및 교육청 등)

- 203개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단체에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개별 견학 등 몸으로 느끼는 감성 환경교육 실시
-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워크샵 개최, 우수사례 발표 및 체험환경교육 발전방안 토의('04. 6. 18~19)

- 환경전문가 400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학교·기업·군부대 등의 환경교육에 강사 및 강사료 지원
- 실험실습 및 영상물 상영시설을 갖춘 '이동환경교실' 운영 및 2만평 규모의 한강 생태학습장을 조성·운영하여 초등생 환경교육 실시
- 국립공원에 92개 탐방프로그램을 개설·운영
- 낚시와 환경, 공직자와 환경보전 등 성인용 환경교육 교재 2종 개발('04. 12)
- 각급 사회단체, 기업체가 주관하는 환경문화행사(글짓기, 미술대회, 응변 등)를 적극 후원, 문화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다. 산림청

- 목적 ; 산림환경교육은 산림생태 구성인자와 그 상호관계 및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임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하여 산림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해야한다는 가치관과 실천력 배양을 목표로 함
- '78년 강원도 강릉 대관령 국유림지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생 70명 대상으로 임간수련 실시
- '80년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숲해설, 숲속음악회 등의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00년대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산림교육 및 문화진흥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문화과 신설
- '01년이후 다양한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예산 외에 녹색자금, 마사회 자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물론 (사)한국산악회, (사)숲해설가협회,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한그루녹색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파트너쉽 구축 운영

라. 해양수산부

- 목적 ; 일반국민들의 해양보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방적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지지 및 참여층 확산을 목표로 함. 해양환경보전 교육교재 개발·보급(3차년도) - 기 개발된 1, 2차년도 교재에 대한 업데이트 병행 추진
- 해양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가진 해양 또는 해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재의 연차적 개발·보급 3차년도 사업추진
- 교재종류 : "해양의 이용 및 보호지역"(가칭)
- 개발방법 : 연차적 교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개발진을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 참여시켜 교재의 질적인 향상 도모
- 교재활용 : 일선 초, 중등학교에서 해양관련 교육시 참고교재 및 지방청, 사회교육단체의 환경교육시 (갯벌생태학교 등) 기본교재로 활용

청소년 대상 해양환경보전 체험프로그램 운영(50백만원)

- 최근 새만금 사업 등으로 갯벌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역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갯벌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부재로 실효성 재고가 필요 ⇒ 본부에서 최초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인 무안 갯벌에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표준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에 의한 현장 진행을 통해 지방청 등에 프로그램 운영 기법 보급
- 무안갯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
- 갯벌체험학습장 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협조(무안군)
-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교육(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참여학생 및 지역별 강사요원 선발(지방청)

하계피서철을 활용한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 전개

- 바다를 찾는 하계 피서객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바다 사랑' 의식 고취 및 새로운 피서문화 정착 유도
-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추진방법
- 기간/장소 : 7~8월/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피서객이 많은 곳
- 추진주체 : 지방청 주관하에 유관 및 환경단체 참여유도
- 추진내용
 - 여객터미널, 여객선 등에서 해양환경보전관련 Video Tape 상영
 - 피서지주변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활동 및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바람직한 피서행태 정착(쓰레기 봉투 배부 등을 통해 피서객의 자율적 참여 유도)
 - 해양환경보전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폐품활용 배만들기 대회' 등 피서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 개최(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로 효과 증진)

해양환경보전관련 행사 지원(30백만원)

- 파급효과가 높은 해양환경보전 관련 행사지원
- '세계 습지의 날', '바다의 날', '국제연안 정화의 날' 등
- 지원내역 : 행사추진비, 해양환경교육 교재 등

3. 환경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에 있어서 환경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괄목할만한 또는 목표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환경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자체 평가이나 네 부서의 문제점을 취합하여 정리해보면 민간이나 학회에서 지적하는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학교교육에서의 환경교육교과목 선택 확대 부족과 전공교사의 채용 부진
- 환경교육전문가 (교육가나 해설가가 아닌 환경교육 내의 전문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수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비
- 범국민 환경교육 체계 구축 미흡
- 지원예산 부족 및 다양한 재원 확보 필요
- 환경교육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 환경교육 수집 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부족
-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의 파트너십 강화 부족
- 적절한 환경교육 시설 부족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환경교육 관련 정책결정자의 교육과 충분한 예산 확보, 최신 해외동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 등이 우선된다. 잠재적인 전문인력 확보는 대학의 환경교육학과와 기존의 교사, 민간단체의 활동가를 양성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이므로 향후 5년간 국가환경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예산 확보와 정책 전문가 양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